

이정복 “근로자 ‘작업 중지권’ 당연한 권리”

〈한국서부발전 사장〉

태안발전 본부서 ‘안전동행’ 행사
근로자 주도 안전관리 성과 공유
작업중지권 신고건수, 3배 확대
신고 창구 다변화·포상금 등 결과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협력사 대표, 협력사 근로자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정복 사장과 협력사 대표 및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험하면 멈춰라”...작업중지권 신고 1년 새 3배 늘어

이번 행사에서 서부발전은 근로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성과를 공유했다. 서부발전이 따르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

는 ‘작업중지권’ 신고 건수는 지난해 27건 수준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9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확대됐다.

이는 서부발전이 원스톱 세이프티콜, 오픈채팅방 등 신고 창구를 다변화하고,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과 불이익 금지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말 도입된 ‘안전조치요

구권’ 역시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작업 전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5건의 요구 및 조치가 실무에 반영되는 실적을 거뒀다.

◆이정복 사장 “협력사 안전이 곧 서부발전의 경쟁력”

이정복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위험하면 멈추고 의심되면 묻고 보고하며, 불안하면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지침에 보호,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점검에 나선 이 사장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작업장을 직접 돌며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즉석에서 조치했다. 그는 “안전의 관건은 실천이며 결국 작업자의 행동으로 완성된다”며 “협력사의 안전이 곧 서부발전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부발전은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안전문화 유도에도 공을 들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태안발전본부 소속 8개 상주 협력기업 근로자 1131명에게 1인당 12.2만원씩, 총 1억 383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코트라는 현지시각 2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2026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Future Mobility Partnering Event)’을 개최했다.

/코트라

코트라 북미 車 공급망 재편 45개社 수주 기회 창출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 열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디트로이트가 한국 자동차 부품사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북미 자동차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뛰어난 제조 역량과 ICT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그 빈 자리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이달 21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디트로이트에서 ‘2026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Future Mobility Partnering Even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퍼커넥트’ 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전통 완성차 및 글로벌 1차 협력사의 공급망 재편 수요를 포착해 북미 양산 공급망 수주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핵심 파워트레인과 전기차 부품, 고정밀 조향·제동 시스템 등 자동차 하드웨어 분야 제조 역량이 뛰어난 국내 기업 45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을 맞이한 바이어 측은 GM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OEM) 기업과 북미 상위 100대 1차 협력사 등 글로벌 기업 40개사로 구성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천항만공, ‘해운·물류 상생펀드’ 100억 규모로 증액

중동발 유가에 연료비·물류비 증가
기업 당 최대 5억, 저금리 융자 지원

인천항만공사가 ‘동반성장 상생펀드’의 지원 규모를 긴급 확대해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협력기업 및 해운·물류 기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늘린다.

동반성장 상생펀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저금리 자금조달 지원사업이다. 시중은행 3개사(하나, 수협, 기업은행)와 협약을 통해 평균 1.52%의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기존 80억 원 규모로 운영하던 상생펀드를 금융회사들과의 협력하에 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했다. 총 100억 원 규모로 증액했으며, 연료비·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원 인천항만공사 경영실장은 “해운·항만·물류 업종은 유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군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상환 및 신청은 ▲하나은행 남동기업센터 ▲기업은행 인천지역본부 ▲수협은행 경인지역금융본부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차질 대응을 위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북항 벌크부두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부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

이다.

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함에 따라, 인천항 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15일 공사는 인천항만물류협회에서 북항 벌크부두 운영사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정세에 따른 항만운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 북항 주요 벌크부두 운영사가 참여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북항 운영 현안 및 중동 사태 영향을 비롯해 1분기 간담회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지원 필요사항도 공유했다. 공사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공사 운영본부 부사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경규 공사 사장이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직접 찾아, 해운 시황 및 물동량 변화 추이 등을 살폈다.

이 사장은 “중동지역 정세변화가 해운·물류시장과 인천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체와 함께 물동량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또 지난달 12일에는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4곳(ECT, HJ IT, ICT, SNCT)과 만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수출기업 미수채권 관리 돕는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수채권 정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최근 개편된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보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 농산물 수출 전 과정 현장밀착 지원

‘K-농산물 수출 기술지원단’ 발대식

농촌진흥청이 수출 전 과정에 걸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논산광석농협유통센터에서 ‘K-농산물 수출 기술지원단 발대식’이 열렸다.

기술지원단은 수출 전 과정에 민관 협력 기반의 밀착 지원을 제공해 품질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프리미엄 수출단지 육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딸기·포도·배 등 수출 전략 품목과 단감·복숭아·키위·감귤·참외·고구마 등 유



수출용 K-딸기.

/뉴시스

망 품목을 포함한 총 9개 품목, 18개 프리미엄 수출단지를 선정한다.

운영 방식도 기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수요자(수출 경영체·통합조직)와 공급자(농진청·유관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품목별 민관 기술지원반’ 체계로 전환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학부모·전문가 108명과 초중고 급식 안전관리

제9기 국민안전급식점검단 위촉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6년도 국민안전급식점검단’을 108명 규모로 꾸렸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학부모, 식약처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점검단은 전국 초중고 급식업체의 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선다.

22일 aT에 따르면 점검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 안전·위생점검을 위한 제9기 ‘국민안전급식점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지방정부·교육청 관계자 합동점검단(58명) ▲ 학부모 참여 ‘학부모점검단(30명)’ ▲ 전문가 참여 ‘급식점검단(20명)’ 등 108명으로 예년 대비 확대 편성됐다.

급식점검단은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위촉된 점검단은 효과적 현장점검뿐 아니라,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현장지도 및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게 된다. 이들이 개선의견을 내면 aT가 후속 조치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